

다산포럼

관직과 재산에 대한 다산의 생각을 곱씹으며



백민정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

다산이 격절(激烈)한 심정으로 자식들에게 당부한 글이 있다. 사대부 집안이 관직을 잃으면 탕잔(蕩殘)하여 천족(賤族)에 뒤섞이니, 절대 경전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가정경제를 등한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자녀에게 보낸 당부는 과거(科擧)와 경제(經濟)라는 두 키워드로 요약된다.

손자 때라도 어떻게든 급제해 관직을 얻어야 하고 과수와 원포를 경영하며 가능한 도시의 안목과 품위를 유지하라고 타이른다. 다산이 강조한 귀한 족속(貴族)은 기본적으로 관직을 얻은 자를 말하지만, 관직이 없다면 도(道)를 지키고 예(禮)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후자를 위해선 예를 수행하기 위한 경제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원포 경영,

뽕나무 재배, 양잠, 양계를 권했다. 다산은 평생 사족(士族)으로 살았고 사대부의 삶을 동경했다. 관료적 자의식이 강했던 그는 사족의 귀함을 잃으면 천류(賤流)로 떨어질 것이라 걱정했다. 사족의 성취와 유지는 다산의 가장 절실하고 내밀한 삶의 욕망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유배지의 다산은 아들에게 폐족(廢族)의 충군(充軍) 위험도 상기시킨다. 청족(淸族)은 군역도 면제받고 혼사도 이루지만 폐족은 그럴 수 없음을 염려한 것이다.

다산은 군역(軍役)을 비롯해 각종 국역(國役)을 면제받던 양반 사족층의 특권을 받기만 채 사회개혁론을 전개할 수 있었을까? 자신과 가족, 후손들을 예외로 보지 않으면서, 다산은 지배층으로서 사족의 역할과 책임을 자임할 수 있었을까? 성급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다산이 이 문제를 의식했고 깊고 고민했다고 본다.

다산이 살던 시대 사족층의 군 면역은 일반적이었는데, 다산은 관직 없는 사족

의 군역 회피, 전직 관리 자손들까지 군역을 면제받던 상황을 개탄한다. 그는 관직 없는 어떤 사족도 국역을 져야 한다고 보았기에 자식들에게 충군의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었다. 다산은 현직을 맡은 자가 아니라면 전직 관리, 공경대부의 자손, 음서의 혜택을 입은 자 누구라도 군역의 책무를 져야 하고 군포(軍布)를 동등하게 납부해야 한다고 보았다.

다산은 사(士) 신분을 구직론(九職論)에 포함하여 병농일치의 군대를 편성하고, 사족이 혼인하면 부모(夫布)를 내도록 하고, 토지와 택지를 가졌다면 전세와 포목도 납부하도록 했다. 다산이 구상한 사회개혁론에서 사족은 양민들과 마찬가지로 부공(賦貢)을 동등하게 납부하는 자로, 현직에서 물러나면 누구나 군역의 책무를 짊어지는 자로 간주되었다. 다산이 생각한 상족(上族)으로서의 사족, 즉 귀한 족속은 양민이 지는 모든 국역에 동참하고 납세에 철저하며 가정과 향촌, 중앙에서 윤리적 지도자로서 자신을 엄격히 단속할 수 있어야 했다.

늦게 취임한 탓인지 나는 아직도 반전세를 전전하지만, 여전히이제에 밝지 못하다. 갑자기 요즘 다산이 일순간 꿈꾸었

듯 토지를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늙으신 부모를 보면, 별잘 드는 따뜻한 집을 지어 드리고 싶고, 어머니가 화초도 가꾸시며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불현듯 나에게도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폭등한 아파트값을 내려라, 중부세를 대폭 인상하라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부동산이 아니면 월급으로 도저히 집을 살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는데 지금껏 나는 무엇을 했는가 싶은 후회도 든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다산의 소망, 가족과 자녀에 대한 우려와 기대는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닌 듯하다.

한편으로 나는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갈망하고 한편으로 나는 사회적 대의를 고민한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없다면 다산에 대한, 혹은 타인에 대한 내 비판은 온당치 못할 것이다. 공의(公義)에 기반한 사회개혁,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에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위태롭지만 균형과 절제의 끈을 놓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社說

‘사용 후 핵연료’ 위험 지역에 합당한 지원을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 소재 자치단체들이 요구해 온 ‘사용 후 핵연료’ 보관소 도입을 위한 법률안 제정이 또다시 좌절됐다. 사용 후 핵연료 등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미래통합당 강석호·유민봉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영광·경주·기장·울진·울주 등 원전이 위치한 5개 지자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폐연료봉으로, 최소 10만 년간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다. 이 때문에 애초엔 이것들을 모아 영원히 격리하는 ‘영구 처분장’을 만들기로 했지만 건설이 지연되면서 40년 가까이 각 원전의 물탱크에 저장하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 1-6호기의 경우 내부 수조에 6436다발을 저장 중이다.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이들 폐연료봉을 발전소 내에 보관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부담을 세금 형식으로 부과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배경에서 제출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산자부의 반대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산자부는 현재 발전량에 따라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사용 후 핵연료 등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 과세로, 원전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산자의 대상과 목적 이 다르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만감이나 커지게 원전 사업자만 대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정부와 원전 사업자는 장기간 영구 처분장 건설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원전이 자칫 영구 핵폐기장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이제 원전 소재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자치단체가 떠맡는 위험에 따른 합당한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일부터 추가 등교 ‘학교 방역’ 만전 기해야

고3 학생에 이어 내일부터 유치원생과 초1·초2학년생, 중3학년생, 고2학년생 등 240만 명이 등교하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과 걱정은 여전하다.

교육부는 방과후강사 등 지원 인력 3만여 명을 각급 학교에 배치해 방역을 강화하고 원격·등교수업을 병행해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등교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 19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지역의 학교는 한 반에 학교에 나오는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도 한 방법이다. 학급단위로 오전·오후반을 운영하거나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수도 있다. 특히 교실 내 학생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급식·이동 중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격주제·격일제 등교나 오전·오후반 혹은 학년별·반별 등교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경우 방역 물품을 비치해 학생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방문객의 출입은 철저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생의 경우 자발적 거리 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더욱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의 전장이 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비상한 방역 노력이 있어야겠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기간은 생활 방역 관리가 가능한가를 시험하는 기간이므로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금까지 지켜 온 생활 방역 지침을 더욱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학원과 스터디카페, 코인 노래방과 PC방 등 ‘학생 동선’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無等鼓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여야 원내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한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협치’ 실험을 위한 테이블로 보여 주목된다. 협치는 상대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우리의 정치 구조상, 대통령이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어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협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됐

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 과거를 뒤돌아봐야 한다.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과반을 얻고도 실패한 열린우리당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지난 대선부터 지방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까지 연전연패한 미래통합당도 ‘전투적 보수 정치’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한다. 그 접점의 출발은 협치가 돼야 한다.

우생마사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말이 있다. 급류에서 헤엄을 잘 치는 말은 최야(蹄)라는 오명 속에 29일 문을 닫게 됐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평가를 받는 만큼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 대한 민심의 기대는 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권이 마주한 현실은 엄중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후폭풍은 IMF 외환위기(1997년), 금융위기(2008년) 때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민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위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말이 있다. 급류에서 헤엄을 잘 치는 말은 최야(蹄)라는 오명 속에 29일 문을 닫게 됐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평가를 받는 만큼 30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 대한 민심의 기대는 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치권이 마주한 현실은 엄중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후폭풍은 IMF 외환위기(1997년), 금융위기(2008년) 때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민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위

기고

황룡강 정신, 그리고 꽃창포 시대



유두석 장성군수

장성군의 한기운대를 가로질러 흐르는 황룡강은 장성의 ‘동맥’이다. 오랜 시간 맑고 깨끗한 물로 자연과 사람을 보살펴 왔다. 장성에서 나고 자란 내게는 황룡강에 얽힌 유년시절의 추억이 많다. 여름이면 댁을 잡고 겨울에는 얼음을 지치며 놀았던 시간들이 기억 한편을 빼곡히 채우고 있다.

최근 황룡강에 얽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담당 부서에 제안했다. ‘황룡강 옛날 사진 공모전’을 열자는 것이었다. 황룡강의 변천사를 사진을 통해 공유하며, 그 가치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함이었다.

70년대 이후로 황룡강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강 상류에 장성호가 조성됐으

며, 곧게 뻗어 있던 강의 모습은 땅의 쓰임에 따라 이리저리 휘어졌다. 유량이 줄어듦과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강변에는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내 황룡강은 ‘재 냉장고’를 장만했을 때 한 냉장고 버리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십여 년 전, 고향 장성군을 관리해 보겠다는 푸른 꿈을 안고 건설교통부에서 명예퇴직한 나는 ‘황룡강이 살아나야 장성도 산다’고 생각했다. 이후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정원 지정을 목표로 체계적인 강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황룡강에서 착안한 색채 마케팅으로 ‘엘로우시티 장성’을 브랜드화했다. 나아가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해 군민의 행복을 목표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황룡강에서는 꽃축제를 추진했다. 영국 유학 시절, 켈시 플라워쇼를 관람한 뒤부터 줄곧 구상해온 이벤트였다. 주위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내게는 ‘한 송이 꽃으로도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다.

그렇게 군민들과 함께 10억 송이의 꽃을 심어 준비한 ‘황룡강 노란꽃창포’는 작년까지 3년 연속 1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주위에서는 인구 5만 명의 농촌에서, 그것도 국토의 가치를 재발견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한다.

황룡강 르네상스와 엘로우시티 장성, 그리고 노란꽃창포의 괄목할 만한 성공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은 군민이 함께 이뤄냈다’는 점이다. 오늘날 엘로우시티 장성이 일구낸 성장과 발전은 5만 군민의 거버넌스를 토대로 쌓아 올린 금지탑이다. 이를 ‘황룡강 정신’이라 부르고자 한다.

‘황룡강 정신’은 모두가 힘과 뜻을 하나로 모아 국토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장성의 새지도를 그려가는 것이다. 장성군은 황룡강 지류인 취암천 물줄기를 바꿔 부지를 확보해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성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고 있다.

장성군은 2022년 전남 체전 유치를 준비 중이다. 또 ‘황룡의 머리’ 격인 황미르랜드에는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마 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황룡강 일원에는 대규모 꽃창포 단지를 조성해 있다. 작년 7월 민선 7기 1주년을 기념식을 통해 ‘황룡강 꽃창포 시대’를 선언한 장성군은 황룡강변 1.7km 구간에 32만여 본의 노란 꽃창포를 식재했다. 이후 초대형 가을 태풍인 링링, 타파, 티파이 닥쳐왔지만 꽃잎이 이겨내고 얼마 전 첫 개화에 성공했다.

올해 노란 꽃창포 20만 본을 추가로 식재할 계획인 장성군은 황룡강 꽃창포 단지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노란꽃창포는 다른 수생 식물에 비해 수질 정화 능력이 5배 정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랑나비를 연상시키는 꽃의 아름다운 군락을 이뤘을 때 장관을 연출한다. ‘꽃창포 시대’는 환경과 사랑을 생각하는 황룡강의 ‘제2의 도약’인 셈이다.

노란꽃창포의 꽃말은 ‘당신을 향한 믿음’이다. 민·관의 두터운 신뢰와 협업으로 ‘무’에서 ‘유’를 창출한 엘로우시티 장성의 황룡강 정신이, 꽃창포 단지를 통해 감동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청춘 특특

위안부 기부금,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니



조서희 광주대 문예창작과 2년

최근 SBS ‘PD수첩’에서 방영된 방송 내용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복지를 위한 ‘나눔의 집’이 사실상 할머니들의 쉼터가 아니라 할머니들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들 가운데 한 명인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5월 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의 내용은 정신기억연대(이하 정의연)에 대한 고발과 윤미향 정의연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이었다. 윤미향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수요 집회에서 받은 성금이 할머니들한테 쓰

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폭로했다. 이어 윤미향의 국회의원 당선을 비난하면서 앞으로의 수요집회에도 나가지 않겠다 선언했다. 즉 정의연 앞으로 온 모든 기부금이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기부금에 대한 회계 자료는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인 고(故) 김복동 할머니를 기리는 ‘김복동 장학금’의 수혜자 전원은 진보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자녀였다. 또한 ‘옥토버웨스트’라는 맥주집 한 곳에서만 기부금 3300여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의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표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잠재워지지 않았다. 결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15년 12월 정대협에 보낸 공문에서 7개 사유를 근거로 정대협을 향후 2년간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재를 내렸다.

기자회견이 진행된 다음 날, 정의연에서 운영하는 ‘나눔의 집’의 한 관계자가 연합뉴스, CBS 측을 통해 내부 고발을 시작했다. “후원금이 단 한 번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쓰인 적이 없는 것으

로 알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내부 고발을 한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다. 방송 ‘PD수첩’에서 나눔의 집 직원들은 얼굴이 공개되는 위험까지 감수하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단순한 기부금 횡령이 아닌 노인 학대 수준이었다. 지난해 6월 한 할머니가 집대에서 떨어져 눈썹 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나눔의 집’은 병원에 데려가자는 직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할머니들에게 식사는커녕 물에 밥만 말아 주면서 직원이 사비를 들여 개인 식사를 가져오자 “할머니 버릇 나빠진다”며 이를 제지했다.

내부 고발 인터뷰와 ‘PD수첩’을 본 국민은 분노했다. 그 많은 기부금은 다 어디로 갔느냐며 행방을 찾았다. 이때 한 네티즌은 나눔의 집 이사회가 ‘할머니들 사후에 호 텔식 요양원을 짓자’라고 했던 발언을 찾아 냈다. 기부금은 살아 있는 할머니들이 아닌 이사회들의 호텔 사업에 쓰일 예정이었다.

끊임없는 논란에 정의연은 ‘나눔의

집’ 후원 해지와 후원 환급에 대한 공지를 띄웠다. 후원 해지는 가능하나 후원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게 ‘나눔의 집’의 입장이었다. 공지가 뜨자마자 많은 사람이 후원 해지를 진행했다.

나눔의집 직원들은 “이 후원금이 할머니한테 안 쓰인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다”며 내부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PD수첩’에 고발한 이유는 “윤영진, 이사진, 정부 부처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이게 바뀔 생각이 없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한 최종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역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그중 위안부는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적 문제다.

피해자들은 고령임에도 꾸준한 집회와 발언으로 우리에게 잊지 말아 달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는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위안부 기부금 문제가 논란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